



로 작태. 세계일보 경영진 자폭하
 ... 참여맨 세계일보 노동조합

언론노동자가 무너지고 있다

엄주웅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장

그 동안 높은 임금, 안정된 직장, 높은 직업 위상을 누리왔던 언론노동자들이 끝없이 무너지고 있다. 신문과 방송사마다 유례없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해고와 임금삭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에 따라 다른 업종에 비해 안정된 언론산업의 노사관계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언론노동자 15%가 해고당해

언론(신문, 방송, 뉴미디어) 부문은

IMF 이전 우리 나라 산업 가운데서 금융업 못지 않게 '거품'으로 부풀었던 산업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안 봐서 불황이 된 게 아니라, 실물경제가 위축되자 기업이 홍보비를 줄이거나 광고를 없애고, 그러다 보니 광고 수입에 의존해 온 신문과 방송사의 경영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신문의 경우, 주요 일간지의 매출액 가운데서 광고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5~80%에 이르고, 방송사의 경우도 KBS 같은 공영방송사조차 광고매출 비중이 55%를 넘었다. 이렇게 광고 의존도가

높은 신문과 방송사가 올 들어 광고 수입이 예년의 절반으로 떨어졌으니 배겨날 재간이 없다. 이번 매스컴 불황을 두고 '사상최악의 위기'라고 하는 업계 일각의 주장도 단순한 엄살은 아닌 것 같다.

문제는 기업마다 경영 악화의 부담을 오로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데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하 언론노련)의 집계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4월말까지 전국의 47개 언론사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수는 모두 3,949명에 이른다. 이 숫자는 전국의 신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파악한 숫자이다. 이는 IMF 이전의 해당 언론사 종사자 총수 약 2만6천명(한국언론연구원, 『신문방송연감』1997.5)의 15%를 넘는 수치이다. 이 비율을 전체 언론 종사자수 4만 2천명에 단순 대입하면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해고된 언론 노동자수는 6천5백 명 가량 된다는 추산이 나온다. 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의 형편은 그래도 나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언론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일단 편집, 편성 등 언론사의 주된 업무보다는 제작, 기술, 지원 등 하드웨어 쪽이 많다. 그러나 동아일보사처럼 기자 해고자만도 수십 명이 넘는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편집, 편성부문의 해고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로는 비편집

부문에서 더 이상 더 줄일 수 없을 만큼 고용조정이 일단락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인원 감축이 기사 쪽에 집중될 것이다. 또 하반기에는 공영방송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해고의 형태도 다른 산업에서 나타나는 모든 방식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전혀 명예롭지 않은 조건의 명예퇴직, 일팔 사표 제출 후 선별 수리, 지명 권고사직, 노골적인 정리해고, 계약직 사원에 대한 계약 해지 등등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모조리 동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노사 협상을 거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회사가 일방 통보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문제가 되면 노동조합이 사후에 명분만 살리는 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 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나은 방송보다는 신문 쪽에서 더욱 일방적이고 강세적인 감원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공정보도의 위기로

언론사 측은 인원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올 들어 4월까지 언론노련 산하 53개 사업장 가운데서 상여금과 통상수당을 체불하고 있는 곳이 13곳,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반납하거나 자진 유보한 곳이 11곳, 임금 삭감을 결정한 곳이 9개 사에 이른다. 호봉승급을 유예하거나 복지비용을 줄인 곳은 부지기수다.

이러한 임금 삭감 공세는 본격적인 98년 임단협을 앞두고 더욱 기세를 부리고

해고의 형태도 다른 산업에서 나타나는 모든 방식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전혀 명예롭지 않은 조건의 명예퇴직, 일괄 사표 제출 후 선별 수리, 지명 권고사직, 노골적인 정리해고, 계약직 사원에 대한 계약 해지 등등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모조리 동원되고 있다.

있다. 신문사 가운데서 가장 경영사정이 나쁘다고 하는 조선일보사조차도 올해 임금 협상에서 상여금 전액 삭감과 호봉승급 유보를 들고 나왔다. 이런 사정이니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의 고통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YTN의 경우 전사원이 3개월째 임금은 물론 한푼의 수당조차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일부 지방신문사 가운데는 임금 수준이 거의 법정 최저임금에 가까운 곳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재편하려는 회사 측의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인원감축과 임금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각 사업부문을 쪼개, 분사(分社)하거나 사내 하청(이른바 '소사장제'와 유사함)으로 분할했다. 동아일보사 등이 이를 뒤따랐다. 기업 내 노동자 일괄 조직화라는 현재 노동조합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게 된 셈이다. 여기에 한때 일부 언론사에서 검토되어 온 연봉제 도입이 임금 삭감 수단을 겸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국민일보, 중앙일보, 경기일보, 무등일보 등 4~5개사가 연봉제 도입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이러한 현상이 낳는 결과는 언론 노동자

의 생활 불안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간 언론 노동자가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최근의 상황은 이들에게도 생존권이라는 말이 피부로 다가올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주목할 것은 이로부터 파생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소유-경영-편집의 모든 면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던 언론사주의 힘은 더욱더 증대되고, 언론종사자의 노동은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고 자본에 의해 장악되는 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이다. 고용불안, 해고 위협 앞에서 기자나 PD의 활동은 위축되기 십상이다. 공정보도에 소홀해지거나 자사 또는 사주의 이해관계가 요구하는 언론활동이 이뤄질 우려도 있다.

기자들에게 광고 수주를 강요하는 따위의 일이 이미 유력한 지역 권위자에서조차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지방에서는 기자들에게 월급을 주는 언론사는 망하고, 월급을 주지 않는 사이비 언론사는 꼬떡없다는 웃지 못할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작금의 언론사 고용불안은 결과적으로 언론이 갖는 가장 고유한 기능인 저널리즘(사회환경 감시, 권력 비판)의 결정적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다.

자사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는 노동자들

사상 최악의 매체 경영난, 대규모의 해고, 생존권까지 거론되는 임금 삭감 등에 대해 언론노조의 대응은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낮은 노동자 의식, 취약한 조직력과 부진한 일상활동에 굳어진 언론노조, 특히 신문사 노조는 거의 속수무책이다시피 했다. 그간 우리 나라 언론사의 노사관계는 신문산업의 무한경쟁, 방송의 시청률 지상주의를 배경으로 한 '자사 이기주의(自社利己主義)'가 지배하고 있었다. 언론매체들의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경쟁 환경 하에서 개별기업의 노동자들은 자신을 회사 또는 매체의 이익과 쉽게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것은 여론매체를 사유화하려는 자본의 지배력과 언론노동자(특히 편집, 편성부문)의 직업주의적 성향이 기업별 노동시장, 노동조합에서 결합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쨌든 오랜 '자사이기주의'에 물든 언론노동자, 노동조합들은 IMF 사태 초기에는 협조적인 자세나 행태를 취했다. 자진해서 임금을 반납하거나 회사의 정리해고 방침에 묵시적으로 동조한 곳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나 동조조차도 노동조합이 대등한 상대자로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노동조합이 먼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이와 관련된 협상을 주도한 KBS, MBC 등의 대기업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자본측은 노동조합을 일종의 대리기구처럼 여기고

일방적인 양보만을 거듭 강요했다.

노동조합 역시 고용문제에 즉흥적이고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었다. 사측이 이미 인원감축의 계획과 실행을 이미 상당히 진행한 다음에 노동조합이 개입하게 되니 기껏해야 결과는 해고자에 대한 위로금 수준으로 귀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관세는 최근 들어 바뀌어 가고 있다. 노동자측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공세가 수그러들 줄 모르자 언론노동자들도 사태를 점차 근본적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한국일보 노조는 이미 경영자와 주주 측의 바리를 전면적으로 폭로하며 경영구조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아일보 노조는 쟁의태세를 갖춰 사측의 호봉 승급 정지 기도를 철회시켰다. 중앙일보 노조는 회사측의 5월5일 어린이날 근무방침에 반대해 전 조합원이 휴무를 강행했다. 세계일보 노조는 한달 넘게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고, 한겨레신문 노조는 경영참가 요구를 내세우며 쟁의상태에 들어갔다. 이런 정도야 다른 산업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겠지만, 언론사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다. 결코 돌파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으로서는 활력을 되찾는 계기로도 되고 있다.

문제는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한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사실 오늘날 언론산업의 상황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언론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면이나 논조가 거의 비슷비슷한 신문들이 광고를 겨냥해 발행 부수를 부풀리기 위해 대량의 무가치(공

짜 신문)를 찍어내서는 버리고, 한달 7천 원히는 구독 1부를 늘리기 위해 에어컨 선풍기까지 끼워 파는 무분별한 물량경쟁 풍토 속에서 신문사의 적자 구조는 이미 IMF 사태가 나기 오래 전부터 고질화되어 있었다. 물량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일념밖에 없는 방만한 경영은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해 손쉽게 금융기관의 돈을 빌려 시설 확장, 판촉비 등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 그 결과 신문 1부를 팔면 월 평균 211억원의 적자가 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었다. (정연구, 「위기진단 신문산업」, 『신문과 방송』98년 3월).

언론개혁과 산별노조가 대안

방송도 권력과 자본의 공급과잉 정책이 위기를 불렀다는 점에서는 신문과 대동소이하다. 6공 정권 말기 서울방송을 시작으로 진행된 방송상업화 정책은 김영삼 정권 들어 이권으로 변질되면서 무수한 방송의 증가로 나타났다. 지역 민방, 케이블 채널, 종합유선방송 등등 해서 문민정부 기간 동안 방송채널만 40개 이상 늘어났고, 그 결과 전국의 방송국 수는 120개를 넘게 되었다. 이것도 모자라 정부는 장미빛 '다매체 다채널, 뉴미디어 시대'라는 거품을 조장하여 위성방송, 지상파 디지털 방송 등 엄청난 과잉투자과 낭비를 추진했던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수많은 신규 방송사들이 거의 빈사지경에 허덕이고 방송산업 붕괴론까지 대두된 셈이다.

따라서 언론산업을 희생하고 언론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단순히 경기 대응적인 긴축정책으로는 오늘날의 언론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언론사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인 인력에 칼을 대는 것은 언론의 위기를 매체 전환의 위기로 만들 것이다. 우리 언론기업의 체질과 시장구조와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언론산업의 비정상적 행태는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 언론의 개혁, 정상화야말로 언론 회생의 길인 셈이다.

노동조합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기업별 노조체계로는 기업주의 자구노력을 강제해 내고 경영에 일정 정도 참가하는 것까지가 가능한 최대한의 역할일 것이다. 사실 이 일도 기업별 체계로는 결코 목록하지가 않다. 그래서 출범 이래 언론개혁을 주요한 요구로 삼고 있는 언론노련은 최근 산별노조 건설 논의를 조합원 사이에 본격적으로 확산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임단협에서 산하 노조가 고용안정협약을 요구하고 공동투쟁을 할 것을 결의했다. 이같은 노력은 비록 걸음마 단계이지만 최근의 언론노동자의 상태와 언론노조의 동향을 보면 결코 전망이 비관적이지 않다. 언론노조도 고투를 겪는 가운데 노동조합다운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다. ❖